

연말·주말특수 '무색'

광주 푸드스트리트존 상인 '고심'

‘백운광장 활성화’ 도심 복합 문화 공간으로 올 8월 개장
 오픈 직후 매출만 ‘반짝’...매달 적자에 투잡 뛰는 상인도
 “콘텐츠 발굴·활성화 전략 수립 절실...방한 설비도 시급”



10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푸드스트리트존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출이 0인 날도 있어 요즘은 투잡까지 뛰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은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먹거리 점포 22곳과 문화예술 점포 9곳이 300m가량 늘어선 도심 복합 문화·상업 공간이지만 연말 분위기를 무색케 했다.

상점마다 반짝이는 전구, 산타 인형 등 성탄절 장식으로 한껏 멋을 냈지만 주변에는 밤 산책을 나온 주민들이 종종 눈에 띠기 어려웠다.

겨울철 손님 맞기로 한창 바빠야 할 빵·만두집에도 발길이 뜸 끊겼다. 지난 8월 푸드존이 문을 열었지만 벌써 점포 2곳은 비워져 있었다.

간혹 보이는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들은 구입한 음식을 먹을 장소를 찾지 못해 한참 서성였다.

빈 점포(0.9㎡)에 취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지만 단체 손님이 이용하기엔 비좁았다. 설치된 스탠딩 테이블(임시 탁자)도 1m 높이로 키가 작은 아동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온 부모는 취식 공간을 찾다가 “앉기가 웬색하다”며 바깥 조경석에 앉아 푸드존에서 산 음식을 먹었다.

한 연인은 “일부러 찾아왔는데 볼거리가 없다”며 이내 발길을 돌렸다.

송건영(29)씨는 “이렇다 할 볼거리도 없는 데다, 아이들과 함께 편히 앉아 먹을 만한 공간조차 마땅치 않다. 다시는 안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운광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입점한 상인들은 매출 급감으로 폐점까지도 고심하고 있다.

4개월째 계속되는 적자에 투잡(two job)을 뛰는 상인까지 나왔다.

카페 업주 A(32·여)씨는 “평일엔 매출이 0원인 날이 많고 토요일 하루 매출은 겨우 6600원 벌었다. 적자가 계속돼 몇 주전부터 매장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시작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가게 상인들도 계속 영입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주인 B(52·여)씨는 “지자체에선 ‘백운광장 도시철도와 공중 보행로가 완공되면 유입 인구가 많아진다’며 상인을 모았지만 공사는 지연되고 있다. 매출은 오픈 당시 2주만 반짝 있었고 요즘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먹거리 상가 입점 상인 C(35)씨는 “지자체가 예산까지 들여 상인들을 입점시켜 놓고 방치하고 있다”며 “남구는 전담 조직을 꾸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문객 성향, 매출 감소 이유 등을 파악해야 한다. 실질적인 푸드존 활성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방문객이 추위를 피할 대형 천막이나 난방 기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화예술 상점을 운영하는 D(42·여)씨는 “관련 부서가 협의해 공원 부지에 포장마차를 만들고 난로까지 들였으면 한다. 겨울철 눈·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월 매출 4000~5000만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 겨울철 방문객이 줄어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24일 스트리트 푸드존 연말 축제를 열 계획이다.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 뉴딜 사업으로 ‘도심 속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고 스트리트 푸드존을 추진했다.

사업비는 총 26억여 원이며 지난 8월 개장했다.

정승호 기자

‘연일 살처분’ 전남도, AI방역수칙 위반농가에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과태료 부과·보상금 감액·정책자금지원 5년간 배제

전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수칙 위반농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농장에서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전남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심각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장주들은 느슨한 방역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생농장을 조사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 세척·소독 미흡, 전실 미운용, 하나의 장화로 전 축사 출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전남도는 농가 경각심 차원에서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정책자금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생농장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0%까지 추가로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산방역 관련 정책자금 지원도 5년 동안 배제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겨울에 발생한 11개 농가의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5%에서 최대 30%를 감액 조치한 사례도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전남도는 AI 오염원 제거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집중 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점검반 100여명을 투입해 소독 실시 여부 등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상황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핵심 차단방역 수칙은 출입 차량은 농장주 관리 아래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 후, 고압 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차량 내부 2차 소독, 농장주와 농장 종사자를 포함한 축산 관계자는 농장 출입 시 전용 신발과 방역복을 착용하고 대인 소독을 시행한 후 출입 등이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핵심 차단방역 수칙 준수를 게을리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주변 가금 농가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전체 농장주는 5가지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매일 꼼꼼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빛원전 4호기 5년 만에 발전 재개...15일 전출력 도달

원자력안전법 따른 법정검사 수검

한빛원전 4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급)가 16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5년 만에 발전을 재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4호기가 11일 오전 3시40분부터 발전을 재개해 오는 15일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빛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18일부터 진행된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법정검사를 수검했다.

증기발생기 교체, 격납건물 공극보수를 포함한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한 정비를 수행해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6호기로 이뤄진 한빛원전은 계획예방정비 중인 1·6호기를 제외한 2·3·4·5호기가 정상 운전되고 있다.

김재환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